

“5·18 가짜뉴스 확대·재생산 여전”

5·18재단·민언련 ‘왜곡 방송·가짜뉴스 모니터링 보고회’

“시민들이 직접 5·18 왜곡 게시물 걸러 심의 요청해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가짜 뉴스가 확대·재생산되고 있어 역사와 왜곡 균형을 위한 언론계·학계 등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18 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3일 기념재단 고백과 증언센터에서 5·18 민주화운동 왜곡 방송·가짜뉴스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보고회에서 발제한 유민지 민언련 운영팀장은 5·18 가짜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블로그·유튜브 등)에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5·18 가짜뉴스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특혜·획대설 ▲유공자 명단 비공개 ▲5·18 계엄군

성폭력 왜곡 ▲헬기사격 부인 ▲북한군 개입설 ▲광주시민의 폭력 시위에 따른 비상계엄령 정당화 ▲광주교도소 습격설 등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고 유 팀장은 설명했다.

특히 국가기관이 검증한 역사를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5·18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과 신군부의 대응 논리를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팀장은 “국가유공자 기관들은 5·18 민주 유공자뿐 아니라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피해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유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고, 5·18 유공자는 전체 유공자의 0.5%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5·18 유공자 수자도 2014년 1월 4250명에서 지난해 1월 기준 4248명으로 줄고 있고, 모든 유공자의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 보도와 국가 기관의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헬기사격’과 ‘제엄군의 성폭력’도 지민원의 시스템 클립과 뉴스티운 등지에서 왜곡되고 있다. 문제는 이곳에서 시작된 가짜뉴스가 블로그·유튜브 계정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지난달 5·18을 왜곡하는 가짜뉴스 142건을 심의해줄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10월20일 까지 접속 차단 또는 정보가 삭제된 5·18 왜곡 게시글은 395건에 불과

했다. 이에 민언련은 최근 6년간 5·18 가짜뉴스 심의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일부 종합편성채널이 5·18을 왜곡하거나 관련 보도를 다루지 않는 행태도 지적됐다. 민언련은 시민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꾸려 종편의 왜곡 보도에 대한 제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유 팀장은 “5·18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학계와 언론계의 역할뿐 아니라 시민의 구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5·18을 왜곡하는 게시물을 볼 경우 주소를 복사해 통신 심의를 요청하는 과정이 간단하다. 많은 시민들이 가짜뉴스를 가릴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왜곡과 편견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념재단과 민언련은 지난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 분석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최남규 기자

전교조 전남지부 ‘조직 개편안’ 처리 촉구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3일 성명서를 내고 “전남도교육청 조직개편의 핵심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지원이다”며 전남도의회의 조례안 처리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현재의 학교는 교사들이 괴도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히 못하고 있다”며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만들어 학교를 지원하려는 조직개편은 학생들의 부족한 학력을 높이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는 “조직개편 특성상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개적 협의가 어려웠다는 전남도교육청의 입장은 이해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며 “교育주체 상호 동수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절차와 방식에 있어 아쉬움이 있는 조직개편안이지만 늦게나마 교육주체간 협의를 통해 만든 만큼 조속히 도의회에서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내부 갈등 속에 지난 달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긴급의안으로 조직개편안 상정을 요청했으나 도의회가 거부했다.

의회는 내부 구성원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일률적으로 22개 시·군에 학교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AI 방역에 놀라 도망가는 철새들

3일 전북 정읍시 동진강의 아생 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자 정읍시청 애교축산과 관계자들이 민석보 일대에서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윤장현 전 시장 보이스피싱 피해에 채용비리 연루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0대 여성에게 수억 원의 사기 피해를 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이 여성의 자녀들 취업에도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윤 전 시장이 자신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A(49·여)씨 자녀들의 채용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들은 광주의 한 사립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

됐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30일 산하기관과 학교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한 뒤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 윤 전 시장이 A씨에게 돈을 입금한 시점과 자녀들의 취업 시기가 비슷한 점에도 주목하고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억5000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으며, A씨의 자녀 1명도 올해 1월 사립학교 기간제교사로

채용됐다.

해당 사립학교 관계자는 “채용 전 당시 윤 전 시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현재 경찰 수사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전 시장이 A씨의 자녀를 취업 시켜 준 정황이 포착돼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협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면 윤 전 시장을 소환해 추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주인 행세’ 편의점 택배 절도 30대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편의점에 보관 중인 택배물을 훔친 혐의(절도)로 A(3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B(34)씨가 주문해 택배보관함에 보관 중인 의류 6개(17만 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슬리퍼를 신고 편한 차림으로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수를 구입한 뒤 택배를 주인 행세를 하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편의점 택배물을 가져갈 때 일일이 신분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이 무료로 막아주다가 도난당한 물품은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보상이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소후 술집서 무전취식 40대 2명 입건

교도소 출소 후 제주 시내 술집을 들며 행패를 부리고 무전취식을 일삼은 4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사기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43)씨와 B(40)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11일부터 11월16까지 약 한 달간 제주 시내 술집 8개소에서 총 8차례에 걸쳐 술값 16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월4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제주 시내 술집서 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등 무전취식을 일삼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전에도 무전취식 등의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하다 올해 9월 중순과 하순에 각각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업자를 상대로 무전취식을 일삼고, 행패를 부리는 주취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히 대응해 지역 사회 안정과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흉기로 동료 혀 다치게 한 외국 근로자 입건

제주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동료의 혀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네팔인 근로자 A(35)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50분께 제주시 이도2동의 직원 공동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흉기를 휘둘러 직장동료 한국인 B(37)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직장 동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행패를 부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도 술 마시고 난동을 피우던 중 흉기로 B씨가 있던 숙소 문을 찌었다. 흉기는 문을 통과했고, B씨는 혀가 흉기에 찔리고 치아 2개가 빠지는 징상을 입었다.

B씨는 곧 병원으로 옮겨져 통합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하객 가장 답례금 받아 가로챈 4명 구속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와 창원서부경찰서, 마산중부경찰서는 3일 예식장 하객을 가정해 답례금과 축의금을 받아 가로챈 A(60)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B(62)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창원의 4개 예식장에서 하객을 가정해 1만원권 지폐가 들어있는 답례금 216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B씨 등 6명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창원 지역 예식장 6곳에서 하객을 가정해 축의금을 낸 것처럼 속여 답례금 11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하객을 가정해 답례금 접수처에 찾아가 축의금을 냈으나 답례금을 받지 못했다며 받아 가거나, 일행들의 식권을 받지 못했다며 식권을 받아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되돌아와 답례금으로 바꿔 받아갔다.

뉴시스

‘5·18 가짜뉴스 확대·재생산 여전’

5·18재단·민언련 ‘왜곡 방송·가짜뉴스 모니터링 보고회’

“시민들이 직접 5·18 왜곡 게시물 걸러 심의 요청해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가짜 뉴스가 확대·재생산되고 있어 역사와 왜곡 균형을 위한 언론계·학계 등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18 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3일 기념재단 고백과 증언센터에서 5·18 민주화운동 왜곡 방송·가짜뉴스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보고회에서 발제한 유민지 민언련 운영팀장은 5·18 가짜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블로그·유튜브 등)에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5·18 가짜뉴스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특혜·획대설 ▲유공자 명단 비공개 ▲5·18 계엄군

성폭력 왜곡 ▲헬기사격 부인 ▲북한군 개입설 ▲광주시민의 폭력 시위에 따른 비상계엄령 정당화 ▲광주교도소 습격설 등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고 유 팀장은 설명했다.

특히 국가기관이 검증한 역사를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5·18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과 신군부의 대응 논리를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팀장은 “국가유공자 기관들은 5·18 민주 유공자뿐 아니라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피해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유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고, 5·18 유공자는 전체 유공자의 0.5%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언련은 지난달 5·18을 왜곡하는 가짜뉴스 142건을 심의해줄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10월20일 까지 접속 차단 또는 정보가 삭제된 5·18 왜곡 게시글은 395건에 불과

최남규 기자